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참여연대(정책실장: 김민영: 723-5300)
제목 임시국회 종료에 즈음한 논평
날짜 1998. 2. 17. (총 2 쪽)

보도자료

여아의 힘겨루기 속에 변질되고만 개혁조치 -임시국회 종료에 즈음한 참여연대 논평-

98. 2. 17(화) 참여연대

국회는 17일 새벽까지 본회를 열어 여-야간의 격론 끝에 당면 현안들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뒤바뀐 소수여당-거대야당 구도의 기세싸움에 치우침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개혁현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반의 개혁 과제들이 새로운 정권의 출범이라는 상황과 국민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유보·왜곡되었다.

17일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볼 때 과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애초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표적으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사항중 하나라 할 기획예산처의 신설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가 여-야간의 힘겨루기 끝에 무산된 점은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적지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예산 편성 지침의 작성 및 재정개혁,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예산편성 및 집행, 감독을 담당할 예산청을 재정부 산하에 둔 것은 정략적 이해에 편승해 또다른 기형아를 만든 잘못된 결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기획과 집행이 분리된 이같은 방안은 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부처간의 대립과 갈등을 과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된다.

지난 노·사·정 합의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초로 노동자와 정부 그리고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당면한 사회·경제적인 제반 개혁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선례이다. 더구나, 당장의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

을 자제한 노동자들의 결정은 대의에 입각한 용기있는 결단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사정합의 사항이 이번 임시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왜곡되었다.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 애초의 합의된 사항이 관련법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수정, 변질된채 국회를 통과하는 등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을 정치권이 부정함으로서 노동자들의 불신과 노사정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얼마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했을 당시 '약속 파기, 반민주적 태도' 운운하다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우리는 다시금 강력히 항의한다.

조각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현 당선자가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권을 담당할 조각을 앞두고 애초 약속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민적 검증'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가 아닐수 없다. 인사청문회가 집권초기의 안정을 해칠수 있다는 신여당과 새정부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저한 국민적 검증을 통해 내각을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다 튼튼한 집권기반을 형성하고 안정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새정부와 여당측은 정치세력간의 약속이라는 소아적 명분이나 눈앞의 정치적 역관계에 연연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